

- 면담자 : 구술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랫동안 마음편히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윤선자

제3절 일제하 광양인의 민족적 저항

1. 일제 경제 침탈과 광양의 노동운동

1) 농민운동

일제는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되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산미증식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조선을 식량공급의 전초기지로 삼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초과하는 양이 빠져나감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 직면하였다.

일제는 자국내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이민은 호남·경남·충남·경기·황해도 등에 집중되었다. 일본인은 자국 농지가격의 1/10~1/20에 불과한 조선의 농지를 닥치는 대로 확보해 갔다. 그들은 소작료 수탈과 고리대 등 조선인의 희생을 동반시키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1910~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세원(稅源)의 확보와 일본인 토지소유의 제도적·법적 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어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농민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본주의적 착취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더우기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는 이중, 삼중의 착취 속에 몰락해 갔다. 농사개량 강제, 육지면 채배 강제, 뽕나무 묘목의 강제 보급, 수리조합 사업의 강행 등의 일제 농업정책은 농민의 현금지출을 증대시키고 추가노동을 강요하여 농민의 경영과 생활을 압박하



일제는 자국내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이민은 호남·경남·충남·경기·황해도 등에 집중되었다.

는 요인이 되었다. 지세·호구세·면비(面費)·농회비·학교조합비 등 각종 조세 및 준조세적 부담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즉 늘어나는 각종 현금 지출로 농산물을 헐값에 팔거나, 토지를 고리대에 저당잡혀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조사사업 직후인 1918~1922년의 조선농촌의 자소작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때의 자소작별 구성비는 자작농 20.4%, 자작겸 소작농 39%, 소작농 40.6% 등이었다.¹⁾ 이는 전체 농가의 80% 정도가 소작지를 경작해야만 하는 빈곤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일제의 식민통치, 반봉건적인 지주제, 자본주의적 관계의 형성으로 과생된 착취 속에 있던 농민은 이를 철폐해야만 하는 과제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족해방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었다.

농민의 현실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실시된 산미증식사업(産米増殖事業)이라는 농촌 수탈 정책에 따라 날로 악화되어 갔다. 일제의 산미증식사업은 조선의 농지경작방식인 소작관행이 완전히 무시된 채 추진되었다. 조선 전래의 토지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소작권도 역시 매매되거나 양도되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조선의 전통적 소작권행 가운데, 토지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소작권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심지어 소작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되었는데, 이는 소작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920년 이래 3차에 걸친 산미증식사업, 1930년 이후 농어촌진흥운동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정책이 강행됨에 따라 조선의 농민은 더욱 영세화되었다. 이는 이전의 일제 농업정책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1940년대 광양의 농경지 소유자별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1)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1941. 246쪽.

2) 조선은행조사부편, 『조선경제연보(朝鮮經濟年報)』, 1948. 27쪽.

	지주 소유지		자소작농 소유지		농경지 총면적	
	천정보(千町步)	%	천정보(千町步)	%	천정보(千町步)	%
계(計)	2,606	57.8	1,903	42.2	4,509	100
답(畓)	1,197	67.7	572	32.3	1,769	100
전(田)	1,409	51.4	1,331	48.6	2,740	100

<표2-34>에서와 같이 1940년대 왜정시대 광양의 소수 지주의 소유 농경지는 전체 농경지의 57.8%이었고, 자작농과 자소작 농민의 소유 농경지는 42.2%에 머물렀다. 특히 지주의 경우는 밭보다 논외 농경지 소유비율

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주요농산물이 밭작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소유비율이 높은 것은 일제의 농업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내의 농업이 붕괴됨으로써, 자국내의 부족한 식량을 식민지에서 공급받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산미증식사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쌀의 상업작물화는 급격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제의 식량정책은 조선의 지주에게 상업작물로서 쌀 생산에 나서게 하였으며, 조선의 지주는 부(富)의 증식방법으로 논의 소유 비율을 높였던 것이다.

한편, 농경지 소유면적이 1정보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민의 72.1%였고, 1~5정보 소유 농민이 23.8%였다. 5정보 이상 소유의 소위 지주라 할 만한 농민은 4.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농경지의 소유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체 농민의 4.1%에 불과한 지주층이 전체농경지의 57%이상의 농경지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농민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1920년대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투쟁하였다. 그 내용은 소작료 인하, 소작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소작쟁의(對 지주투쟁)와 수리조합·산림조합 반대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건 농민투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에 대한 소작농민의 집단적 투쟁은 날로 격렬해졌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주의 가혹한 수탈 때문이었지만, 3·1운동을 계기로 급격하게 팽배된 민족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의 발전에 의한 필연적인 소산이었다. 또한 소작쟁의는 민족해방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의 성격으로 전개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계급적 대립투쟁의 성격으로도 나타났다. 그리고, 농민운동은 농민주체의 자율성에 입각한 농민 자주운동과 농민복지 향상의 성격으로 전개된 것이기도 하다.

농민운동은 소작쟁의를 통하여 지주에 대한 소작조건 개선 등 경제적 권익보장과 일제의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경제투쟁의 성격을 보였다. 말하자면, 농민운동은 농민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집단적 행동이면서, 아울러 친일지주·일본인 지주에 대항하는 반일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당시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반봉건적 성격과 반제국주의적 항일운동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전개되었다.

소작농은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지주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렸다. 그들은 지주로부터 받는 경제적 억압에서 벗어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결해야만 했다. 1920년대의 농민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



농민운동은 소작쟁의를 통하여 지주에 대한 소작조건 개선 등 경제적 권익보장과 일제의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경제투쟁의 성격을 보였다.

3) 조선총독부 경무국편,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1933년판), 168~169쪽.

라 결성되었는데, 이들 조직은 소작인조합(小作人組合)·소작인동맹(小作人同盟)·소작인회(小作人會)·농민회(農民會)·소작인공제회(小作人共濟會) 등의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는 소작료 인하·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 부담·소작권의 취소 및 이동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표2-35〉 1921~1933년 농민단체의 수³⁾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3	23	107	112	126	119	160	307	564	943	1,759	1,380	1,301



신간회는 사상적·계급적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등이 서로 운동력과 운동방식, 투쟁대상 등을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표2-3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농민단체는 1921년에 처음 조직된 이후 1931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좌우합작의 신간회운동이 본격화된 1927년 이후부터 신간회가 해체된 1931년까지 5년 동안은 농민운동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계급투쟁보다 정치투쟁에 나선 사회주의자가 연합한 신간회는 사회운동의 단일한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간회는 사상적·계급적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등이 서로 운동력과 운동방식, 투쟁대상 등을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또한 농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청년단체나 노동단체 등 기존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조직되거나 혹은 상호 연대 속에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표2-35>는 농민단체수의 변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울러 사회운동의 상호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합법적인 사회운동 영역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식민지 조선내의 각종 사회단체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해체되어갔다. 일제는 농민조합 활동의 탄압, 해산 강요, 새로운 조직의 창립 금지 등을 강제하였고, 그에 따라 1931년 말에서 1932년 중반 사이에 전국의 거의 모든 합법적 농민조합이 점차 와해되었다. 농민조합은 점차 지하로 잠복하여 비합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남지방의 소작쟁의는 1920년 5건, 1921년 4건, 1923년 24건, 1924년 59건, 1925년 105건 등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쟁의 강도와 투쟁성, 그리고 농민의 조직화 정도도 급속히 강화되었다. 특히 면·리 단위의 고립분산적 조직이었던 농민단체가 점차 군 단위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지역간·단체간의 연대와 운동의 통일성을 강화하였다. 그것은 1923년 2월 28일 순천·여수·광양·보성의 농민단체들이 남선농민연맹회를 결성하여 연

대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소자료 4할 이내, 지세공과의 지주부담 등을 결의했던 것에서 일례를 찾을 수 있다.

광양의 소작쟁의는 1923년 1월에 처음으로 발생되었다. 광양군 각면 소작인대표 70여 명이 광양군 청년회관에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지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한다.
2. 소작료는 5등으로 나눈다.
3. 두량(斗量)할 때는 4각두(角斗)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
4. 소작료 운반은 10리 이내로 한다.
5. 소작권은 무리하게 이동하지 못한다.
6. 지주에게 품삯없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7. 본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소작인과는 관계를 끊는다.

이 내용은 다른 지역의 소작쟁의 요구조건과 거의 일치한다. 소작인의 요구조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봉건적 소작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가 철폐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세공과금의 소작농 부담이나, 무임 노동력 제공 등이 여전히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량(斗量) 기구를 4각두(角斗)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두량 과정에 나타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소작인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김완근(金完根)·정진무(鄭晉武)·정원선(鄭元善)·여동기(呂東琪)·박종선(朴鍾善)·변노현(卞魯鉉)·서삼식(徐三植) 등 광양 천도교청년회와 각 마을의 소작인대표가 소작쟁의회(小作爭議會)를 구성, 쟁의를 벌였다. 이는 당시 금곡(金谷)·불등(不藤)·삼본농장(森本農場) 등 일본인 지주가 마름(舍音)을 통해 7할에 이르는 소작료를 거누는 가 하면, 두량(斗量)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작권을 박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쟁의에 당시 광양군 인덕면 조선인 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쟁의에서 소작쟁의회는 4할 이상의 소작료를 납부할 수 없다며 지주들에게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인덕면 소작인회 노남용(盧南鏞) 회장과 간부 1명은 불납동맹(不納同盟)을 맺은 것에 의해 구속되었다. 소작쟁의회 청년들과 농민들은 광양경찰서에 쇄도하여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광양군수 김동준과 일본인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가 철폐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이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세공과금의 소작농 부담이나, 무임 노동력 제공 등이 여전히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서장 곡우(谷虞)는 농민대표와 함께 지주회(地主會) 개최를 제의하였다. 지주회는 동년 5월 6일 광양군청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의 소작쟁의회 대표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작료는 좋은 땅은 4할, 척박한 땅은 2할로 한다.
2. 세금은 지주가 부담한다.
3. 두량은 공평히 하되 신두(新斗)로 사용한다.
4. 소작인에게 부역(賦役)을 시키지 않는다.
5. 소작료는 군청에서 20리까지만 무료로 운반한다.
6. 소작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작(移作)치 못한다.
7. 지주는 상식이 없는 마름(畝音)을 고용하지 않는다.
8. 천재지변에 의해 다액(多額)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지주가 부담한다. 단 2원 이하는 소작인이 부담한다.

이상의 요구조건은 1월의 소작인 대표들이 결의한 내용보다 좀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이후에도 소작쟁의는 계속되었다. 1924년 1월 8일 곽약면 성황리에서 소작인 300여 명이 소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1. 소작료는 4할 이내로 한다.
2. 지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한다.
3. 소작권은 본 회에서 인정할만한 과실(過失)이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4. 종자 및 비료대는 지주가 부담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1923년 5월 6일의 지주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여전히 소작관행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작료 4할, 지세공과금의 지주 부담 등 핵심사항이 미결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태는 인덕면에서 소작쟁의가 다시 발생했던 것에서 나타난다. 1924년 4월 소작인회는 고을 소작료와 소작권 박탈에 대항하여,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박탈된 토지를 집단으로 경작하였다. 또한 1925년 11월 9일에는 노농연합회를 통하여 지주 400여 명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였고, 12월 11일에는 노농연합회(勞農聯合會) 임시총회를 열어, 소작인에게 사형(私

刑)을 가했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철폐운동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동척(東拓) 마름에 대한 대책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흐름의 하나였다. 물론 소작쟁의의 직접적 대상은 지주였다. 지주는 조선인 지주·일본인 지주·일본인 농업회사(동척 등) 등 이었다. 일본인 지주나 회사에 대한 농민의 항일적 성격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조선인 지주 역시 일제 통치자의 은밀한 비호 아래 그 부(富)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반지주운동(反地主運動)은 반친일파운동(反親日派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광양의 노동운동

일제하 노동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대규모 공장과 광업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가능했다.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자의 양적·질적 확대를 초래하였다. 노동자의 양적·질적 확대는 사업장 내에 많은 노동자의 결집을 유도하였고, 이것은 노동운동의 자양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일제시대 노동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조직의 역사가 짧고, 노동자가 식민지시대 최하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제시대 노동운동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1910년대 국내의 공업구조는 일제의 직접적인 약탈과 관련된 정미업·조면업 등 농산물 가공부문이 압도적이었다. 1920년대에는 정미업·제사업·제면업 등과 같이 일제의 농산물이나 원료의 약탈에 종속된 부분이 공업생산의 중심을 차지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 독점자본이 특히 함경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국내의 공업은 기본적으로 일제가 식민지 공업구조의 수탈 및 예속관계에 재편시키려는 의도에 있었다는 것이 식민지 기간 전체에 일관되어 나타났다.

공업의 종속적·식민지적 기형성은 공장의 민족별 구성에서도 드러난



사진2-115 : 농민소작쟁의에 따른 광양군청 경비강화 모습 (1927년)



조선인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의 일제에 대한 예측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제시대 조선인의 직업은 절대다수가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비율은 8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다. 공장수·생산액·자본규모 등에서 일본인 자본의 주도가 뚜렷하며, 조선인은 토착 가내 수공업,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다. 1920년대 이후 일제에 예속된 소수의 조선인 자본가를 제외하면, 조선인 자본가는 일본인과 비경쟁부문, 조선인 상대의 상품생산에 한정되었다.

조선인 노동자의 구성비를 살펴보아도 일제의 침략성이 드러난다. 여성노동자·유년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식료품·방직 등 경공업 부문이 조선의 주력 산업부문이었고,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50%이었고, 유년노동자를 포함하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일본 자본의 침투에 따라, 교통통신시설의 도입, 유통기구의 확대에 따른 토목건축·운수운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였던 임금노동자가 공장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산업구조의 일본 예속성과 투자자본의 영세성, 그리고 후진성을 드러냈다.

조선인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조선의 일제에 대한 예측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제시대 조선인의 직업은 절대다수가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비율은 8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상업·운수업 등 서비스업이 3~4%, 공업은 1.5~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구분이 없이 전국에 걸쳐 비슷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현실은 비참한 지경에 있었다. 광산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1920년대말 전국의 광산노동자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직업은 다른 노동에 비하여 별로 임금상(賃金上)의 특전이 없는데다가 가장 위험한 성질에 속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였으므로, 사상자(死傷者)가 많이 발생하였다. 1920년대 통계를 보면, 광부 1만인에 대해 매년 사망자 25~30명, 중상자 90~100명, 경상자 1,300여 명이라는 놀라운 산업재해를 보였다. 그러나 광산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어도 직무에 기인한 부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노동치 못하면, 일급액(日給額)의 50% 내지 80%정도로 최대한 9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죽으면 장례비(葬禮費) 10원 내지 15원, 가족부조금 50원 내지 150원을 지급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광산노동자의 산재율(産災率)은 최소 14%에 달했으며, 또한 산재를 당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거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그에 따른 부상은 거의 노동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광산노동자의 1개월 내의 휴식일수와 1일 휴식시간을 살펴보아도 노동조건의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1개월 내의 휴식일수는 휴일이 전혀 없는 광산이 전체 44.1%에 달하였고, 1일이 3.2%, 2일이 43.6%, 3일이 5.8%이었다. 휴식일수 3일 이내인 광산이 전체의 96.7%이었다. 이 가운데 휴식이 전혀 없는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38.1%, 1일이 1.2%, 2일이 48.1%, 3일이 6.5%이었는데, 이는 소규모 광산이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광산 수 대비 광산노동자를 통해, 광산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로써 살펴보면, 소규모 광산일수록 광산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심했고,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도 열악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더우기 1일 휴식시간을 보면 이러한 유추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휴식시간이 전혀 없는 광산이 1.9%, 30분 이내 2.4%, 1시간 이내 11.7%, 1시간 30분 이내 39%, 2시간 이내 13.6%이었다. 노동자 수는 휴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2.5%, 30분 이내 4.0%, 1시간 이내 17.6%, 1시간 30분 이내 50.9%, 2시간 이내 9.0% 등이었다. 1일 휴식시간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었던 광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휴식일과 휴식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재해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함으로써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 경영자는 노동력 착취에만 매달렸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속에서 높은 산재(産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노동자는 산재 보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광산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하의 조선에서는 노동력착취에 기대어 투자이익을 창출하려는 자본가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처럼 참혹한 노동조건에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던 노동자는 자본가의 횡포로터 벗어나기 위해 단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3·1운동 직후인 1921년부터 각종 형태의 노동단체 결성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의 노동단체 결성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2-36>과 같다.



참혹한 노동조건에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던 노동자는 자본가의 횡포로터 벗어나기 위해 단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3·1운동 직후인 1921년부터 각종 형태의 노동단체 결성이 이루어졌다.

4)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の朝鮮における治安狀況』, 1933, 168~169쪽.

(표2-36)		1920년대 노동단체수 ⁴⁾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단체수	3	90	81	111	91	128	182	352	432	465	561

<표2-36>에 의하면, 1920년대 초에는 100여 개에 불과하던 노동 관련 단체가 192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 강제병합 이후 헌병과 경찰을 이용한 공포통치를 자행했던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을 표방하며 유화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유화정책은 표면상 일제에 적대적이지 않은 단체, 언론, 문화 활동을 용인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민족분열과 이간을 책동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였다. 노동단체의 증가는 물론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원인으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의 결과였다.

이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일제의 만주침공, 중일전쟁, 진주만 공격 등으로 나타난 식민지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변화를 보였다. 1920년대 말에 발생한 세계경제대공황은 일제의 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의 노동력과 자원의 수탈에 나섰다. 또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신민화 등의 주장은 민족 말살에 나서는 일제의 지배정책을 대변해 주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 변화는 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 언론, 문화활동 등의 급속한 위축을 초래하였다. 특히 1925년 공포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은 각종 단체, 언론, 문화활동 등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조선인은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고자 단체를 결성하여 경제투쟁을 넘어 반일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 적극 대항하였지만, 대내외적 상황변화는 이러한 노력을 헛되게 하였다.

전남지방에서도 1920년대 전반기에 노동공제회·노동친목회·노동회·노동단·노동대회·노동조합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목포 20개, 광주 17개, 순천 16개, 광양 10개, 담양 9개, 장성 8개 등이 조직되었으며, 23개 전남지역 시군 전체에 153개가 있었다. 이들 조직은 시기적으로 1920년에서 1930년 무렵까지 창립되었고, 1930년대 이후부터는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 비합법 방식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들 노동단체는 운동의 주체를 '노동'이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민이나 농업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활동에서도 농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광양 노동회는 소작문제에 관여하였고, 고흥노동회는 농업에 관련된 노동임금



전남지방에서도 1920년대 전반기에 노동공제회·노동친목회·노동회·노동단·노동대회·노동조합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노동단체가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촌이나 농민과 명확히 분리되지 못하여, 농업노동자도 임금노동자와 동일시한 결과로 짐작된다.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은 대부분 노동임금의 제정, 노동시간의 결정, 조합원 사이의 상호부조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상황, 생활상태조사, 근검절약 및 저축의 장려, 소비조합이나 협동조합의 운영, 공동숙박소의 설치 등 조합원 후생과 복리 등도 관심사 중의 하나이었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교양과 계몽을 통한 의식의 각성에도 노력하였는데, 야학회나 강연회, 강좌, 연설회, 연구회, 순회문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양지역의 노동단체는 192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옥룡노동친목회(1924. 2. 21.), 인덕면도월리노동회(1924. 3. 10.), 광양군노동회(1924. 3. 16), 진월면노동회(1924. 4. 27.), 노농연합회(1924.5.16), 세풍노동회, 광양노농청년회(1924. 6. 28.), 광양목공조합(1925. 9. 8.)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의 특징은 노동자만의 조직이 아니라 농촌과 연합, 혹은 특정 직업 종사자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즉 인쇄, 목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산별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다. 산별적 노동조합의 결성은 각 직종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광양지역에는 광업의 개발로 광산노동자도 급증되었다. 옥룡·옥곡의 금은광(金銀鑛)(1926), 용강의 금은광(1926), 옥룡의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1930), 광양·골약·옥곡의 금은연광(金銀鉛鑛)(1932) 등의 광산이 그 예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양에서도 광산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보수, 잦은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광산노동자의 단체행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32년 1월 12일 광양의 금광광부 800여 명이 임금인하에 반대하여 동맹파업을 했던 것이나, 1936년 3월 26일 초남광산(草南鑛山)의 동맹파업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초남광산의 경우는 광부 600여 명이 노동시간의 연장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에 들어갔지만, 경찰이 강경진압에 들어가 주동자를 검거하자 진정되었다. 특히 1924년 3월에 창립되었던 광양노동회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세 및 공과금, 소작료 4할, 소작권 보장 등



광양지역의 노동단체는 192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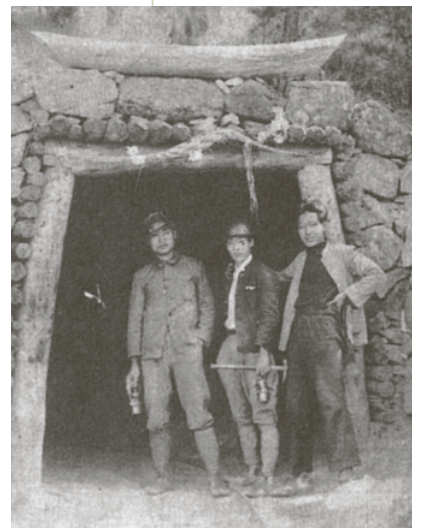


사진2-116: 광산노동쟁의시 본정광산 광부모습



1940년대 노동운동은 광양출신의 김채룡(金彩龍)이 가담한 전북 김제의 광양광업소 사건이 주목된다. 그는 1941년 3월 김원주(金源柱)·오호영(吳浩榮) 등과 함께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을 당하면서 항일의식을 키워 갔다.

의 소작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단체가 단지 노동자의 문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행동노선에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20년대 대규모 사업장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노동쟁의가 격화되었다. 노동쟁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파생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1925년에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쟁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였다. 노동자는 이 법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를 점차 인식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노동자 자신의 생존권과 직접 영향받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노동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 3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더욱 열악해졌으며, 노동조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었다.

1940년대 노동운동은 광양출신의 김채룡(金彩龍)이 가담한 전북 김제의 광양광업소 사건이 주목된다. 그는 1941년 3월 김원주(金源柱)·오호영(吳浩榮) 등과 함께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을 당하면서 항일의식을 키워 갔다. 또한 일제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미명 아래 민족말살을 획책하고 민족적 탄압을 강화해 가자,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내선일체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독립을 위해 초석이 될 것을 맹세한 후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한국문학을 연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이후 광양광업소에 근무하는 청판인수(淸坂仁秀)와 평전통대(平田統大) 등에게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쫓겨갈 것을 촉구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상기 김채룡(金彩龍)은 1941년 8월 일본 경도(京都) 기독교청년회(基督教靑年會)의 야간 중학부에 진학한 뒤 1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국내 동지들과 서신을 교환하다 1941년말 경도 굴천(掘川) 경찰서에 검속되었다. 1942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2. 청년운동

일제하 청년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농민·노동운동, 야학(夜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족운동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청년회(靑年會)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910년대의 청년단체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공개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단체는 일제가 식민통치에 필요하여 용인한 것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단체는 민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방침을 대중 속에 전파하는 어용적 성격을 지녔다.

3·1운동의 성과로 제한적이거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자, 청년단체 역시 급격히 그 수가 증가되었다. 어느 계층보다 현실에 비판적이고 사회사정에 민감한 청년층은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현실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20년도 말에는 전국적으로 순수 청년회가 251개, 종교관계 청년회가 98개였고, 1922년 9월에는 각각 488개, 271개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황해도, 전남, 경남, 경북, 평남, 평북 지방 등이 특히 활발하였다. 이 가운데 전남과 경남북은 청년단체가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지역이고, 황해도와 평남북은 기독교가 민중 사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음이 반영된 결과이었다.

1920년에는 지역적 연계가 없이 독립적·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청년단체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하여 동년 6월 경성의 청년활동가 주축으로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가 발족되었고, 다시 동년 12월 2일 조선청년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연합회는 사회혁신, 지식탐구, 사상적 단결, 덕의(德義) 존중, 건강증진, 산업진흥, 세계문화에의 공헌 등 7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합회가 실력양성론, 독립준비론의 관점에서 운동방침을 결정함으로써 곧바로 운동 전개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활동방침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청년운동에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에서 그 전략·전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하는 시도이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단체가 서울청년회이었다. 서울청년회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조선청년당대회(全朝鮮靑年黨大會)를 개최하였다. 광양에서는 광양청년회의 김주



일제하 청년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농민·노동운동, 야학(夜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울청년회는 1924년 4월 21~23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양에서는 광양청년회·광양육영구락부 등이 참가하였다.

수(金周翰)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청년회의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민족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 종교문제, 교육문제 등 광범위한 사안에 걸쳐 그 해결방안이 토의되었고, 다수자인 무산계급 및 노동계급 해방의 선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결의되었다.

이 대회 이후, 연합회는 점차 청년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났고, 대신 사회주의적 청년단체가 청년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청년단체의 전국적 중앙기관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청년회 등은 전조선청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조선청년총동맹 결성에 나섰다. 이 계획에는 연합회도 합류하였다. 서울청년회는 1924년 4월 21~23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양에서는 광양청년회·광양육영구락부 등이 참가하였다. 운동방향은 청년운동을 민중해방운동의 한 부분으로 규정,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그 방법으로는 강연회·강습회 등을 통한 청년의 계몽과 의식훈련을 상정하였다. 이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혁명적인 부분과 타협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혁명적 민족운동은 찬성한 반면, 타협적 민족운동을 철저히 배척했다는 부분에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사이의 통일전선 형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청년운동에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노동청년과 농민청년의 조직화가 진전되었다. 즉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청년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일반화되면서, 각지에 무산청년회·노농청년회·노동청년회 등의 이름으로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 1926년경부터는 직업별 노동청년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얼마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그 이유는 조직내의 분열과 조직구조상의 결함, 그리고 일제의 탄압 등으로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분파들의 주도권 경쟁에 휘말려든 지방의 청년단체는 통일적인 운동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각 단체별로 현안에 매달리는 상태에 이르렀다.

광양에서도 여러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를 <표2-37>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7>

왜정시대 광양지역의 청년단체

단체명	설립일자	설립목적	주도층	비고
광양청년회	1923. 3.24. 이전			
광양노동청년회	1924. 6.28.	노동·농민운동		
일광청년회	1924.10. 9.		광양의 유지	
광양여자청년회	1924.10.13.			
광양청년연맹	1925. 4.27.		사회주의 운동계열	
전남동부청년연맹	1925. 9.		순천·광양·별교의 14개 청년단체	
섬거청년회	1926. 2. 7.		진상면 섬거리 청년	
조선청년총동맹광양청년동맹	1929. 4. 7.	미신타파, 부인(婦人)야학, 맹원(盟員)훈련	위원장 김전(金銓)	

<표2-37>에서와 같이 1920년대 광양지역에는 많은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 1924년 6월 28일에 결성된 광양노동청년회(光陽勞農青年會)는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광양의 유지들이 모여 일광청년회(一光青年會)를 창립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광양여자청년회(光陽女子青年會)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1925년 4월 27일에는 광양청년연맹(光陽青年聯盟)의 안광천(安光泉)이 ‘역사의 진화와 청년의 사명’이라는 주제의 청년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경찰의 금지조치로 도중에 중지되고 말았다. 이 광양청년연맹은 사회주의운동계열의 단체인데, 이것은 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한 김주환(金周謹)이 광양독서회사건으로 재판받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순천·광양·별교지역의 14개 청년단체 27명이 순천에 모여, 전남동부청년연맹(全南東部青年聯盟)을 조직하였다. 또한 1926년 2월 7일에는 광양군 진상면 섬거리 청년 주도로 섬거청년회의 창립총회가 진흥회관(振興會館)에서 개최되었고, 1929년 4월 7일에는 광양의 청년 60여 명이 조선청년총동맹광양청년동맹(朝鮮青年總同盟光陽青年同盟)을 조직하고 위원장에 김전(金銓)을 선임한 뒤 미신타파(迷神打破), 부인야학(婦人夜學), 맹원훈련(盟員訓練) 등을 토의하였다.

11월 11일에는 광양을 포함한 전남동부 6개 군의 사회운동가들이 주체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농민·청년운동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일본경찰이 이 회합(會合)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모임 불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표들이 참석하여 비공식적 모임을 함으로써, 모임에 참석했던 11명이 검속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광양에서는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광양의 청년단체는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광양에서는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광양의 청년단체는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제는 만주사변에 이은 만주지역 진출,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광양의 청년단체는 새로운 방향의 운동노선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청년회 활동가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독서회(讀書會) 활동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광양의 청년들은 100여 명이 체포되었고 10여 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가. 박봉두(朴鳳斗)옹의 인터뷰
(1982년 8월~12월. 광양군청 공보실)

광양청년회 구성층은 두 갈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학생층이고 하나는 지방청년입니다. 말이 청년회이지 국가독립을 위한다는 사람들은 장년층이라도 가리지 않고 다 이 청년회로 모였더랬지요. 내 기억으로는 1922년 경입니다만 이 때 광양읍 인서리 동청에서 광양청년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위원회에 참가했던 인물들은 소작쟁의 위원회 간부이던 김완근(金完根)·정진무(鄭晋武) 지방청년으로는 김용훈(金容勳)·박준수(朴準洙)·박준규(朴準圭), 유학생으로 남봉수(南鳳洙)·김석주(金錫柱)·정순화(鄭順和) 등이었죠.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청년회를 汎郡의인 단체로 결성할 것을 결의했으며 동시에 회관을 마련할 것도 결의했어요. 일단 결의가 되니까 광양청년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었는데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고 거기에다 준비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박준규(朴準圭)가 활동을 많이 해서 1년 후인 1923년경에는 광양읍 칠성리 459번지에서 부지 1,500평과 건평 50평인 초가를 마련해서 광양청년회 결성대를 거쳐 광양청년회가 발족되었어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당시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에다 밭 1,000평, 임야 2정보를 청년회 기본자산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립당시 광양청년회 회장에는 김용훈(金容勳), 간부진으로는 김완근(金完根)·정진무(鄭晋武)·박준수(朴準洙)·김경묵(金敬默)·최학열(崔鶴烈)·정봉식(鄭奉湜)·박수봉(朴洙鳳)·김성학(金成學)·김태범(金泰範)·신철주(申喆柱) 등이었으며 이 외에도 뜻있는 사람은 너나없이 참가했으니 그 수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 200명에서 300명 사이였을 거라

고 생각되는군요. 청년회가 발족하여서 편 첫 번째 사업은 안창호(安昌浩) 선생이 제창한 무실역행주의(務實力行主義)의 실천운동이었습니다. 광양청년회관에다 청년학교를 설립한 것도 다 그런 까닭에서였지요. 이 청년학교는 3기를 통해서 130여명의 학생이 수학했는데 수업연한은 3년 이었습니다. 과목은 조선어·산수·역사·일본어 등이었어요. 당시의 학생들은 대부분 한문서당에서 한문을 익혔으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보통학교에 진학하기를 꺼린 사람들 가르치는 교사보다도 오히려 고령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는 최학열(崔鶴烈)·차남두(車南斗)·정봉식(鄭奉湜) 등이었는데 방학중에는 유학생들이 내려와 교사진이 보강되곤 했어요. 혹자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을, 어떤 사람은 청산리 전투에서의 독립군의 승리를, 박열사건(朴烈事件)등을 강의하기도 해서 듣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청년회의 분열은 우리 민족운동으로 보나 광양사회로 보나 참 안된 일이지요. 청년회 내부에서 생긴 좌우파의 갈등이 결국 분열에 이른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청년학교는 그런대로 제 1기생이 3년 과정을 마친 다음 폐교되었는데 3년을 마친 졸업생은 서희수(徐希洙)·박향래(朴香來)·김채익(金彩益)·박기화(朴基和)·박종선(朴鍾善)·이차진(李次眞) 등 40명이었습니다. 1928년 신간회좌파(新幹會左派) 검거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광양청년회 간부들이 검거되자 광양청년회는 실질적인 종말을 고하였던 것입니다.

3. 신간회 운동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운동은 3·1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극복방법은 두 갈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교육진흥과 경제발전의 토대 확충 속에서 민족운동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로부터 가혹한 탄압과 수탈을 당하는 기층민중의 조직화와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민족자본가나 중소기업인이 동조하였고, 후자는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지식인과 청년, 그리고 일부의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적극 수용하였다. 이 두 갈래 경향은 일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민족의 발전이 없다는 점에 공

통의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내외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이처럼 민족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흐름 속에서 민족독립 혹은 민족해방 운동을 추진하던 세력은 상호 연대·협동의 필요성이 내부에서부터 대두되었다. 특히 민족주의 내부에서 민족의 절대독립론에서 한걸음 물러나 자치운동을 전개하자는 민족개량주의적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와 연대를 통해 항일운동전선의 공고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 역시 민족개량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독립의 선결과제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결과 분과투쟁의 청산, 사상단체의 통일, 대중의 단결과 민족해방 의식 각성,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과의 적극 제휴 등을 주장하는 정우회 선언(1926. 11.15.)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민족협동전선에 의한 민족유일당의 건설’이라는 당위성 속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사회주의자가 제휴하여 민족운동의 통합, 합법적인 결사운동, 대중적 투쟁조직의 결성 등의 목표아래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 2월 15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신간회에는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자와 부르조아 세력과 차별성을 보다 철저히 한 사회주의 세력의 전진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신간회 창립 이후,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청년·사상·농민·노동단체 등은 신간회를 지지·후원을 표명하거나 신간회 창립을 위해 자진 해체 또는 통합하였다. 신간회 지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5월부터였다. 이후 전국 각처에서 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28년 4월을 기점으로 신간회의 지회설립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회 설립의 급감 이유는 1928년 2월부터 8월까지 계속된 조선공산당 검거사건과 그에 따른 일제 경찰의 강력한 탄압, 그리고 지회 설립요건을 갖춘 지역들이 1928년 3월 이전에 대부분 지회결성을 완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회 설립과정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한 것은 지방신문기자들이었다. 신간회지회설립준비위원회가 『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의 지국 사무실에서 개최되거나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수이었다. 광양 역시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전국 149개 지회 가운데 16%가 이에 해당한다.



신간회는 일제시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정치단체 중 가장 큰 결사체였다. 신간회는 1927년 1월 15일 창립하여 1931년 5월16일 해소될 때까지 만 4년 4개월 동안 존속했으며, 지방의 지회조직은 150여 개, 회원 수 4만여 명에 달하였다.

신간회는 일제시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정치단체 중 가장 큰 결사체였다. 신간회는 1927년 1월 15일 창립하여 1931년 5월16일 해소될 때까지 만 4년 4개월 동안 존속했으며, 지방의 지회조직은 150여 개, 회원 수 4만여 명에 달하였다. 신간회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만한 규모·활동력·존속기간을 가졌던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시기 민족운동사상에서 신간회가 갖는 의미는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신간회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단체였다. 신간회에서의 양 세력의 협조와 협동경험은 해방이후 남북분단이 계속되는 현재에도 귀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양 세력의 바람직한 협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 세력의 불완전한 협동과 협조 또한 반성과 반추의 역사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만나 최대의 협동 세력을 이루었으나, 이후 양 세력 분열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신간회 광양지회는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광양농민운동의 주도자인 김완근(金完根)·정진무(鄭晋武)는 일찍이 조선공산당에 가입했었고, 1925년 11월의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기소된 99명 가운데 김완근·정진무·신명준(辛命俊)·정순제·정순화 등 5명은 모두 신간회 광양지회의 주도 인물이었다.

신간회 광양지회가 설립된 것은 1929년 9월 8일이었다. 지회설립의 전체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지회가 설립되는 것은 드문 일에 속하는데 이것은 1925년 검거된 위 5인이 1929년에야 석방되었기 때문이었다. 광양지회의 집행위원장은 신명준(일명 玄海)이 선출되었고, 간부들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 : 김재옥(金載玉 : 교육출반부장) · 김진(金鎭 : 서기장겸 서무부장) · 김성학(金成學 : 서무부원) · 김영호(회계 겸 재정부장) · 김완근(조사부장) · 변정변(卞貞燮 : 조사부원) · 정순화(조직선전부장) · 김태현(金台炫 : 조직선전부원) · 김창호 · 김석주(金碩柱)

검사위원 : 정진무(검사위원장) · 김학근(金鶴根)

기타임원 : 신채현(申采鉉 : 재정부원) · 허경구(許敬求 : 교육출판부원)

공산당원이었던 정순제를 포함하여 16명의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자. 이를 위해 김태현과 1934년 광양독서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8·15공간에 조선공산당 광양지역 조직책으로 활동했던 박봉두(朴鳳斗)의 증언에 의해 <표2-38>을 작성하였다.

신간회 광양지회 임원의 인적사항				
성명	직업	재산정도	특기사항	비고
정순제	시대일보 기자, 대중신문사 창립발기인		1929년 출옥 후 하동이주, 신간회 하동지회 간부	정우회 회원
김완근	한학	중소지주	농민운동, 사상운동	
정진무	한학, 천도교 접주	중소지주	광양소작쟁의 주도	
신명준	조선일보 기자			하동 사람
정순화		지주	해방공간에 건준, 인민위원회 활동	
김석주		중소지주	일제하 도의원, 초대 광양군수, 민족주의 진영	5대 국회의원
김성학		자소작	좌익세력의 행동선봉장	
김 전		자작	30년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관여, 여순사건 때 처형	
김영호		자작	3·1운동에 참여, 민족주의 진영 혹은 조공에 참여(?)	
김태현			45년 해태조합 이사장	전남 3대 도의원
김창호	인덕수리조합 서기		민족주의 진영	
김학근	한학	중소지주	김완근의 동생	
변정섭	한학	자소작	소작쟁의 적극 참여	
신채현				
허경구	신문지국 운영	자작	민족주의 진영	



사진2-117 : 김완근

광양지역 청년운동·노동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정순제는 1929년 출옥 후, 하동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시대일보의 기사를 거쳐 대중신문사 창립발기인이었다. 그의 하동 이주 후, 광양 신간회지회는 김완근·정진무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표2-3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양 신간회지회의 간부는 그들의 재산소유 규모를 볼 때, 중소지주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소지주는 분류 기준이 모호하지만 김완근·정진무·김석주·김학근 등 4명이었고, 정순화는 1,000석지기에 달하는 지주에 속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작·자소작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부류도 많았다는 점인데, 김전·김영호·허경구 등은 자작에 속하였고, 김성학, 변정섭은

자소작에 불과하였다.

광양 신간회지회 간부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점

이다. 먼저 언론인이 정순제·신명준·허경구 등 3명으로 비교적 많은데, 이것은 광양 신간회지회 주도층이 언론인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물론 한학(유학)을 직업으로 하는 인물이 김완근·정진무·김학근·변정섭 등 4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인덕수리조합 서기였던 김창호가 신간회 광양지회에 참여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신간회의 좌우합작 노선이 드러난다. 다만 정순제·김완근·김성학·김전·김영호 등 사회주의자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김석주·김태현·김창호·허경구 등 민족주의자의 참여도 알 수 있다. 특히 3·1운동, 소자쟁의 등 농민운동, 조선공산당 등 사상운동,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인물들이 신간회 광양지회에 모두 모였으며, 또한 해방이후의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국회의원, 도의원, 광양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신간회 광양지회는 광양지역의 유력인사 모두가 참여하는 단체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간회 광양지회를 장악한 부류는 사회주의 진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핵심 인물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신간회지회 설립이 미루어 진 것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이 사회주의자들은 광양의 농민운동·노동운동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신간회원으로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도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신간회는 신간회의 조직차원에서 다른 부문운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도, 지원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모든 지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간회 회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농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4. 학생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光州學生獨立運動)은 3·1운동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시대에 전국에서 함께 일어나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밝힌 의거였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가 민족분열정책(문화정치)에서 민족동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던 와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운동이 갖는 투쟁성과 자주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



광주학생독립운동(光州學生獨立運動)은 3·1운동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시대에 전국에서 함께 일어나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밝힌 의거였다.

사적 의의를 갖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광양출신의 인물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광양의 학생운동을 살펴보자.

일제는 1910년 이후 식민지 조선통치의 기본방침인 ‘직접통치’와 그것을 위한 ‘동화정책’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다. 동화정책은 조선민족의 정책성을 말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침 위에서 모든 정책은 수행되었고, 특히 교육은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조선인 학생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민족 차별 교육과 식민지 노예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는 외침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일제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일부 민족주의자에게 언론사나 반일적이지 않는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온건한 ‘문화운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방향을 보다 개량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친일세력을 포섭하고, 노동운동·농민운동·사회주의 운동을 치안유지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탄압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식민지 지배 정책을 수행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학생들에 의해 비타협적 투쟁노선 속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필연적이었다. 호남지방은 한말 이래 일본인 농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었다. 또 이전의 국유지를 불하받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장이 곳곳에 설치된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인 농민은 동척과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소작을 해야했으며, 점차로 밀려들어오는 일본인 이주농민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이었다. 호남지방의 학생들은 일제의 이와 같은 경제적 수탈에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나주지방에는 동척의 농장을 비롯하여 일본인 농장이 산재해 있었고, 조선인은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영산포를 통해 목포항을 거쳐 일본으로 실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당시 한반도 내외의 상황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시켰다. 3·1운동 이후 상해에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내까지 연통제 등의 조직이 영향을 미쳐 정보와 독립자금을 수합하고, 국내의 민중에게 독립의 희망을 일깨웠으며, 파리강화회의·워싱턴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독립군은 봉오동



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당시 한반도 내외의 상황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시켰다. 3·1운동 이후 상해에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렸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청년회운동, 신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신교육운동은 3·1운동 이후 급격히 고양된 교육열을 수용하여, 학교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족운동은 당시 민족의 절대적 목표였던 독립운동을 탈정치화시킨 개량적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한계를 드러낸 1923년경부터 급격히 수용되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념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이해하였다. 사회주의사상은 사상단체운동·청년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 양자의 협동전선 결성에 대한 여론도 커져갔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던 사회주의자가 결합되어 1927년 2월 신간회가 성립되었다. 192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이와 같은 국내외의 민족해방운동의 동향에서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고, 광주학생독립운동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에서는 성진회(醒進會)와 독서회(讀書會), 그리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소비조합 등의 조직적 활동이 주목된다. 이러한 학생조직은 신간회나 다른 지역의 학생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청년학생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역량이 총동원된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손색없음을 의미한다.

독서회중앙본부에서 활동한 광양출신 인물로는 김상환(金相奐)이 있다. 그는 조국의 독립과 사회과학연구 목적의 성진회(醒進會)에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그 주동 학생으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 10월 김보섭(金普燮)과 함께 당시 광주읍내에 있던 김시성(金時成)의 하숙집에서 김몽길(金夢吉)·여도현(呂道鉉) 등과 만나 항일운동 방안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그후 이들은 회합을 통해 항일정신을 고취하면서 동지 규합에 힘써 1929년 6월경에는 회원이 20여 명에 달하였다.



독서회중앙본부에서 활동한 광양출신 인물로는 김상환(金相奐)이 있다.



사진2-118 : 광주학생운동
진원기념비

그는 광주고보생 20여 명과 함께 무등산에서 ‘독서회중앙본부’의 하부 조직으로 광주고보 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그는 동회의 대표 겸 조직교양 부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이렇게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활동하다가 1929년 11월3일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때에는 학생들을 지휘하여 농구실을 때려 부수고, 삼·괭이·목봉 등을 꺼내어 광주고보 시위 대열에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검속된 그는 금고 6월,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 받았다.

또한 광주학생 독서회 관련에 대해서는 다시 주동자로 지목되어 1930년 10월 광주 지방법원에서 피검된 학생 중 최고형인 징역 4년형을 언도받았으나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외에도 광양군 골약면 출신 광주농업학교 5년생 최태주(崔泰周)는 김상환과 함께 1차 시위에서 검속되어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정귀석(鄭貴錫)은 성진회 관계로 기소되어 형을 받았다.

5. 소년운동과 광양소년군

한국 소년단 운동 창시자의 한 사람인 조철호(趙喆鎬)는 소년단 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화랑도를 삼았다. 그것은 단원에게 “너희는 이 민족의 화랑이다. 민족을 구하는 선봉이다.”라고 항상 말했던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소년단 운동은 일제의 감시와 산발적인 활동 때문에, 그 체계와 결속이 부진하였고 활동내용도 부진하여, 조직이 쉽게 와해되는 등 그 기복이 심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년단(Boy Scout) 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소년단 조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천도교 중심의 조선소년단 조직이고, 둘째는 조철호의 주도로 조직된 조선소년척후군, 마지막으로 정성채(鄭聖采)의 조선소년척후대가 그것이다. 조선소년단은 1921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소년단은 천도교를 주축으로 조직되었는데, 소년군 탄생의 과도기적 모습이었다. 이 조직은 외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등장하였다. 반면 소년척후군과 소년척후대는 전세계적 조직이었던 소년단의 영향 아래 조직되었다. 소년척후군은 1922년 10월 5일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창설되었는데, 외래의 소년단



일제시대의 소년단 조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천도교 중심의 조선소년단 조직이고, 둘째는 조철호의 주도로 조직된 조선소년척후군, 마지막으로 정성채(鄭聖采)의 조선소년척후대가 그것이다.

모방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조류 속의 민족의 건실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일환의 성격을 가졌다. 소년척후대는 기독교청년회의 조직망을 활용하여 1922년 소년척후군의 창설 무렵에 조직되었다. 소년척후대는 기독교라는 국제적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소년단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소년척후대는 소년단 운동이 국제적 청소년 운동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소년단의 본래적 이념과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는 순수한 입장에서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소년척후군과 소년척후대는 근원은 서로 같지만 이념과 실천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전자가 일사분란한 통수계통과 훈련 등으로 성장하였던 반면, 후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소년단 본래의 순수성을 철저히 이행했다.

조철호의 소년척후군과 정성채의 소년척후대는 세계 청소년 운동이라는 같은 목적에서 조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소년척후단조선총연맹을 결성하여 양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맹의 표어와 주의 및 방침이 소년척후군에 비해 소년척후대의 영향이 많이 작용되었고, 세력 역시 기독교에 기반을 둔 소년척후대가 점차 장악하여갔다.

결국 두 단체는 소년단 운동의 이상과 훈련방법의 차이 등으로 결별하기에 이른다. 즉 조철호는 서양식 방법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지 말고 조선식으로 고쳐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성채는 원래의 방법과 이념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조철호는 조선소년군총본부를 창립하였다. 이처럼 비록 통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지만, 이들 단체는 조직과 활동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독립을 위한 실력배양의 산실로 되었다.

광양에서의 소년단 운동은 앞서 언급한 두 갈래의 계통 가운데 조철호의 조선소년군에 속했다. 광양에서는 1925년 9월 3일 척후소년의용단의 명칭으로 소년단 운동이 시작되었다. 광양의 소년단 활동은 박봉두의 증언을 옮김으로써 갈음하고자 한다.⁵⁾

내 기억으로 그때 광양은 조철호 계통의 제14대대로 발족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일본육군사관학교 26기생이었지요. 이 단체는 주로 봉사활동을 했고 민중계몽도 담당했지요. 소년군은 군대식과 같은 제복을 갖추고 군대식 훈련을 받았어



광양에서는 1925년 9월 3일 척후소년의용단의 명칭으로 소년단 운동이 시작되었다.

5) 광양군지편찬위원회, 『광양군지』, 1983. 335쪽

요. 광양 제14대대장은 김상효(金相孝)였고 간부진은 백낙철(白樂哲), 이 사람은 일명 광해(光海)라고도 불렀습니다만, 김진옥(金鎭玉)·김동수(金東洙)·정광호(鄭光昊)·김태범(金泰範)·하재봉(河在鳳) 등이었어요. 모두해서 대원이 한 50명 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당시에는 광양보통학교 학생들로 당시 태극기를 만드는 등 3·1운동의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소년군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원들은 대부분 광양청년회원이기도 했지요. 광양소년군의 활동은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몽활동, 봉사를 주로 하였는데, 화재시에는 진화에 동원됐고 수재시에는 수재민 구호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죠.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은 현대식 악기를 마련해서 악단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것예요. 그대의 악단들은 대고(大鼓)에 김태범, 소고(小鼓)에 김동수, 클라리넷에 정광호, 트럼펫에 김진옥, 바리톤에 백광해였습니다. 이 악대는 광양에서는 처음 생긴 것으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나 체육경기가 있을 때에는 의례히 동원되어 인기가 대단했더랬지요. 이에 영향을 받아 후진들이 많이 배출되었구요. 당시 일반적으로는 소년군 악대보다 광양청년회 악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군도 신간회광양지회 좌파 간부들이 검거됨과 동시에 탄압이 가중되자 1928년경 자연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소년운동은 1937년 9월 3일 조선총독부의 명령에 의해 해체되었다.)

6. 광양 독서회 사건

독서회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일체에 항거하여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단체는 학교단위로 조직하여, 이를 상위기구에 연결, 거대조직으로 확대하는 구조를 취했는데, 이 역시 광주고보생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그 중심인물은 성진회원으로 광주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유학을 하고 있던 장재성이었다.

독서회 중앙본부는 자기들의 사명을 ‘우리의 과제는 자본가계급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 중점 임무는 ‘고등보통학교 혹은 농업학교를 졸업하는 자는 사회에 나가 농민 및 노동자에게, 사범학교를 졸업하는 자는 교직에 나가 학교 생도에게, 재학생은 일반 학생에게 선전활동을 한다.’는 수준에 있었다. 여기서 보듯이 독서회 중앙본부는 민족독립과 사회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졸업 이후까지의 장

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도 같은 학교의 일반학생 혹은 지역의 연고있는 청년, 가르치는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1929년 하기방학을 맞이하여 성진회 출신 사범학교 졸업자들은 후배인 독서회원들에게 ‘지방무산청년회의 선전’에 필요한 지침과 요강을 담은 ‘하기 휴업 시의 우리의 활동범위’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그러한 공간으로 장재성의 가게와 ‘학생소비조합’을 활용하였다. 소비조합은 일제에 의해 ‘경제의 독립, 조합을 통한 경제투쟁, 일본인상인에 대한 비매동맹(非買同盟), 동지상호간의 연락’ 등의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광양의 독서회(讀書會)는 일제의 탄압으로 광양의 청년회 조직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1934년 무렵, 광양청년회 대표 12명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반제투쟁전선(反帝鬪爭戰線)의 형성에 있었다. 그러나, 그 주동자들은 1934년 가을 일제의 경찰에게 광양의 청년 100여명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형사부(刑事部)의 판결⁶⁾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 10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박영진(朴永震), 박경래(朴炯來), 김지태(金誌泰), 정학규(鄭學奎), 김주환(金周勳) 등이 각각 징역 2년, 박기동(朴基棟), 박준오(朴準午), 박봉두(朴鳳斗), 김갑곤(金甲坤), 김희곤(金希坤) 등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특히 김희곤은 전남경찰국 특별고등과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출감 후 사망했다.

7. 극예술연구회의 민족적 저항운동

극예술연구회는 광양출신인 정세영의 활동이 주목된다. 정세영은 일본 동경(東京) 소재 일본대학(日本大學) 예술부에 재학 중이던 1943년 2월 동지들과 모임을 갖고 태평양전쟁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항일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을 근거로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민중들을 지도·계몽하는 한편 일제가 소련과 개전(開戰)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호기로 삼아 재미(在美) 독립운동가 및 재일(在日) 한국인 학생들과 연계, 일제히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 모집을 위해 그는 동경 거주 외국인들과 교섭하



광양의 독서회(讀書會)는 일제의 탄압으로 광양의 청년회 조직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1934년 무렵, 광양청년회 대표 12명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반제투쟁전선(反帝鬪爭戰線)의 형성에 있었다.

6)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소화(昭和)9년(年) 형공합(刑公合) 제54호」



극예술연구회는 광양출신인 정세영의 활동이 주목된다.

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검속되었다. 그는 1944년 8월 1일 대판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재상

제4절 대한민국의 성립과 변란

1. 해방정국과 광양

해방의 날,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옥에 갇혔던 이들이 인력거로 트럭으로 풀려나올 제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아이들은 새해 입을 때때옷을 꺼내 입고
 어른들은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였다.
 서울 장안을 뒤덮은
 태극기 우리 기,
 소경들이 구경을 나왔다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윤석중>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심훈, 1930>

아동문학가 윤석중(1911-)은 해방이 되자 우리 민족의 기쁨을 ‘서울